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빈부격차 악화, 저소득층 소득은 큰 폭 감소

01 주요 내용

-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크게 줄면서 소득불평등은 더 악화*
 -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39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상위 20%)는 821만3천원으로 1.7% 증가
 -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4.51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상승
 -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만890원이지만 월평균 지출은 122만8919원으로 적자액이 30만8029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1분위 소득이 줄어든 것은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며, 고령층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1·2분위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줄었지만 3·4·5분위의 가계소득은 증가하였고, 지출은 1·2·3분위가 줄었고 4·5분위는 증가
 - 계속되는 경기 불황 영향으로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 가구 간 이전지출은 3.7% 감소, 종교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도 3.1% 줄어들
 - 반면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연금 지출은 각각 4.7% 증가
- 인구 고령화로 은퇴 후 '소득 절벽' 과 맞닥뜨린 노인의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유입**
 - 소득 하위 10%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5.4세, 소득 하위 20% 가구 역시 가구주 평균 나이가 61.1세로 전체 가구주 평균 연령(51.2세)보다 크게 높음
- 고령화·은퇴 쇼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복지·일자리 등을 함께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
 - OECD는 한국의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려면 최저소득 수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공적 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
 -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기초연금·근로장려금(EITC)·맞춤형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8.19일자.

**이데일리, 8.22일자 기사

***OECD(2015). 한국경제보고서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복지재단(2016)의 경기도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득 10분위 배율은 0.333으로 2014년 0.302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빈곤에 가장 취약한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여 노인빈곤해소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빈곤불평등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2.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이 필요

01 주요 내용

-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 가족의 귀순은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으며,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수요가 증가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
 - '13.8월, '14.1월, '14.5월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기본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을 신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에서 실시하며, 2016년 기준 예산액은 2,023억 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협약조정을 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사항을 심의
 -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과정은 해외공관 보호 및 국내 이송 → 합동신문(2~3개월) → 보호결정 → 초기적응교육(12주, 하나원) → 거주지 보호(5년)로 진행

〈표 10〉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하나원	기본 교육	12주(392시간 교육)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기준 700만원 지급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 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사회보장	생계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례적용
	지역적응 교육	지역적응센터에서 2주(60시간) 교육 및 프로그램
취업	직업훈련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수당 지급(120만원~160만원)
	자격취득	자격취득 시 200만원
	취업 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업체 근무 시 250만원 지급(최대 3년)
	고용지원금	급여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3~4년 지급
	자산형성제도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자료 : 국회에 산정책처(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평가. p.6~7(재구성)

-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민원 및 제도 개선 요청이 늘어가는 가운데, 맞춤형 정착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대하고,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2008년부터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 주무 부서를 설치·운영 중
 - 경기도는 북한과 맞닿아 있고,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등 통일에 대비한 선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해 STB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검토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약 6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보호기간 이후 2~3년 동안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제2의 해복프로젝트 실시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북한이탈주민 경기도에 최다 거주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 거주인구는 약 8천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29.3%), 도내 시군별로 화성·수원 지역에 최다 거주*
 - 2016년 5월말 기준 전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27,105명이며 이 중 29.3%에 해당하는 7,935 명이 경기도에 거주
 - 최근 3년 간 전입자 추이는 '13년 406명, '14년 333명, '15년 338명 등임
- 도내에서 화성시 거주인구가 753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 700명, 용인 616명, 평택 585명 순인 반면 과천 6명, 연천 9명 등 시군별 거주인구 편차 존재

*경기도 보도자료 (2016. 6. 15.)

〈표 1〉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계	화성	수원	용인	평택	안산	김포	부천	성남	고양	광명
7,935	752	700	616	585	559	536	520	454	378	364
군포	의정부	파주	시흥	오산	포천	남양주	안성	안양	양주	이천
342	322	289	258	253	195	185	143	97	71	71
광주	양평	동두천	의왕	여주	하남	구리	가평	과천	연천	
44	48	29	26	24	26	18	15	6	9	

(단위: 명)

-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 대응을 해 온 것으로 평가
 - 지원정책은 크게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이탈주민 취업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관련예산은 약 15억 원 수준
- 그간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실시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채용의무화, 최초 전입자 기초물품 지원 등이 있음

**도내 하나센터는 권역별 4곳 설치 (동부·서부·남부·북부)

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전담조직 설치 ✓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채용 의무화 ✓ 생활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돌봄상담센터 운영(이탈주민 인력 활용)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전입가구에 가전·가구·의류 등 기초물품 지원(민간자원 연계) ✓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지자체 최초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중요
 -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지원정책의 경우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나, 실제로 당사자에게는 계속적인 도전과 위험이 존재
 -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국가위임사무에 한정하기보다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립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시·군 간담회

영역	1 차 회의		2 차 회의	
	일시	장소	일시	장소
건강	8.30.(화) 10: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0:00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13 호
인프라	8.30.(화) 10: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0:00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13 호
주거	8.31.(수) 14: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0:00	수원시 평생학습관 세미나실
소득과일자리	9.1.(목) 14:00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9.2.(금) 10:30	파북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노인장애인	9.1.(목) 14: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4:30	파북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03 FACT CHECK

지니계수,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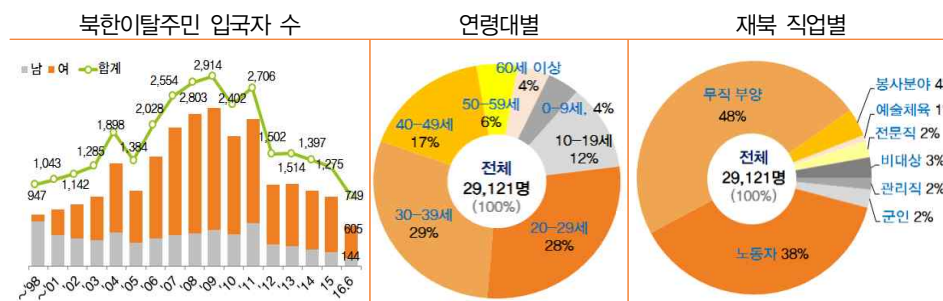
- 정부는 지난 5월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들의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양호하여 개선세가 지속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심화
 - 지니계수는 2009년 0,314를 정점으로 지난해 0,295로 처음으로 0,3 아래도 떨어짐
-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적을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
 - 2014년 기준, OECD의 국가들의 지니계수 평균은 0,32로, 우리나라는 0,302로 전체 17위,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니계수가 소득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존재
- 지니계수는 경기가 계속 나빠지거나 디플레이션 등의 상황에서는 소득 분배 개선과 상관없이 수치가 개선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며,
-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소득상위 계층이 적게 보고되어 지니계수가 낮게 측정되는 오류 발생
 -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8700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로 이루어져 고소득자의 누락이 많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도 포함되지 않음
 - 2013년 기준, 대상자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은 815만원**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소득세를 납부한 약 1330만명의 상위 5%의 월평균 소득 3176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
- 지니계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인 만큼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 활용 등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소득 불평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5.28.일자.

**한겨레, 2013. 6.18. 기사

04 통계로 보는 복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 2016년 6월까지 입국자는 29,543명
 - 한 해 입국자 수는 2009년이 2,914명으로 가장 많고,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500여명대로 입국인원 감소, 2015년에는 1,275명이 입국
 - 여성의 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전체의 70%를 차지
- 연령대 별 입국자는 20~30대가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40대(17%), 10대(12%) 순
- 북한 거주 시 직업은 무직·부양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고, 노동자가 38%로 조사됨

* 단위 : 명
* 2016. 6월 기준